

전시회 참가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2006 국제 교통·물류 박람회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4. “대행사”라 함은 벅스코(BEXCO)를 말한다.

제2조 전시면적 할당

1. 주최자와 대행사는 신청접수순, 전시품의 성질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전시면적 및 위치를 할당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준비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전시자에 할당된 전시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와 대행사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조 신청 및 참가비 납부절차

신청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1 무역센터 1905호 2006 국제 교통·물류 박람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과 동시에 참가비 및 관리비 총액의 50%를 납입하여야 한다. 전시면적은 신청마감일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전시면적을 할당 기준에 의거 배정하며, 잔금은 2006년 8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참가비 및 부스 설치비

참가비는 무료이며 조립식 부스 설치비는 ₩ 300,000(부과세 별도)이고 독립식부스 설치비는 참가사 자체에서 부담한다.

제5조 참가비 내역

참가비에는 전시장소, 24시간 외곽경비, 통로청소, 홍보, 전시회 디렉토리제공 등이 포함된다.

제6조 설치 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와 대행사측이 규정한 기간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대행사측에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 주최자와 대행사측에 대한 정보 제공

전시자는 주최자와 대행사가 부스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 시공에 관한 자료는 물론 2006 국제 교통·물류 박람회의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최자와 대행사측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전시실 관리

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전시부스에 배치하여야 한다. 전시자의 활동은 할당된 전시면적을 벗어날 수가 없으며, 주최자와 대행사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보험, 보안 및 안전

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 주최자와 대행사는 전시자 및 관람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계조치를 강구할 것이나, 전시자의 모든 물품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스탠드 및 전시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하며, 주최자와 대행사는 필요시 시공작업 및 실연을 제한할 수도 있다.

제10조 현장판매

전시회의 참가목적은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를 실연하고 관람객에게 보여주는데 있으며, 전시자는 현장에서 판매활동을 전개할 수가 없다. 단, 주최자와 대행사가 별도로 정한 특별 코너에서의 판매활동은 예외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세금 및 기타 모든 사항은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위험부보

전시자는 전시 스탠드 및 전시품의 도난, 훼손 또는 여하한 종류의 개인 상해에 대하여도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주최자와 대행사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 해약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와 관리비를 기한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 또는 대행사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전시회 변경

주최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도 전시자는 주최자와 대행사에게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 보충규정

주최자와 대행사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BEXCO의 제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 대행사,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